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4.4.10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목

차

contents

개 회 사	■ 유 승 민(새누리당 · 국방국방위원회 위원장)	5
-------	-----------------------------------	---

축 사	■ 황 우 여(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9
	■ 신 계 룡(새정치민주연합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11
	■ 유 일 호(새누리당 정책위의장)	12
	■ 송 경 용(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13

주제발표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경과	15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21
	– 이 종 훈(새누리당 · 국회의원)	

토 론	■ 김 기 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39
	■ 김 형 미(iCOOP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40
	■ 유 향 제(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41
	■ 이 성 수(신나는 조합 상임이사)	42
	■ 문 보 경(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43
	■ 김 정 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44
	■ 김 종 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45

별첨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47
------	-------------------	----

별첨 2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81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창립대회 화보	

별첨 3	구례 자연드림파크 현황 및 현장간담회	87
	구례 자연드림파크 현장방문 화보	

개 회 사

“새누리당이 社會的經濟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보수정당으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해온 새누리당이 어떻게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적경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한 것은 분명 우리 경제의 기본질서가 自由市場經濟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119조 2항이 “국가는 均衡있는 국민경제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の 濫用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미 우리 헌법의 입안자들은 자유시장경제만이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경제체제가 아닐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19조 1항과 2항 사이의 해묵은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119조 1항과 2항 모두에 충실한 정당이 되어야 ‘헌법에 충실한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1항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2항의 의미를 간과했다고 반성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약속했지만, 집권후 그 약속은 퇴색되고 있으며, 공약 후퇴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심각한 양극화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 하는 지금, 우리는 헌법 119조 2항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체제를 지키는 것은 어느 국가든 보수세력의 책임입니다.

건전한 보수세력이라면 공동체의 붕괴를 막아내는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안보가 보수의 책임이듯이,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 또한 제대로 된 보수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에 주목합니다.

전통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소득·일자리 -- 이는 둘 다 소중한 것들로서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와 자유시장경제의 성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한국사회, 한국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그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합니다.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이러한 것들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이런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문구처럼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 이러한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이 오래 동안 진보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다면, 우리 보수는 그런 진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우리 보수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을 자각하고, 추구하고, 더 확대 발전시키는 노력을 진지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은 지난 3개월간 참으로 열심히, 진지하게 노력해주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특위의 모든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의 첫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의 산물입니다.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안전행정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로 그 이름과 담당부처가 다르고, 지원체계에는 칸막이가 있고, 현장에서는 법적 혼란과 지원시책의 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금융과 공공구매의 지원이나 민간자원의 연계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느냐에 관한 법안입니다.

이 기본법안은 오래 전부터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존재해왔던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적경제 본래의 취지로 換骨奪胎하는 개혁의 시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본법안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프로젝트의 수행에 행정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우리 관료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태동기에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본법안이 규정한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이 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과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가 기울이고 있는 일련의 입법 노력이 오늘의 이 기본법안과 많은 공통분모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공약들을 채택하고 실천해갈 수 있도록 지난 3월 6일 발족한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이 기본법안 하나만으로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인프라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본법의 제정은 의미있는 출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본법 제정에 따른 부수법안들의 개정은 물론,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의 개발에 더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뜻 깊은 공청회에 축하, 사회,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내빈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주실 소중한 의견들은 기본법을 발의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유 승 민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2013년 12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위원과 민간자문 위원께서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완성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유승민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님, 이이재 총괄간사님, 이종훈 기획조정분과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들과 민간 자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주축으로 하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를 보완함으로써 활발한 자유시장경제와 정의로운 경제 민주화를 두 축으로 균형 있고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 원리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양날개와 같은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가 조화롭게 움직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동시에 민생을 살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저출산·고령화 현상 또한 복지재정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적 역량을 총결집해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새누리당은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는데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공청회가 일자리 - 복지 -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와 관련기관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 우 여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신계륜위원장입니다.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하고 오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유승민 위원장님과 이이재 간사님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열네분의 의원님들의 노력에 우선 감사드리며 이 입법과정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이루어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과 실천으로 사회적경제가 성장해야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당내에 구성하고 이미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고 국회에 제출될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의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무리가 없다면 판단된다면 공동발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복잡한 정쟁의 한 복판에서 여야가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별도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해서 서로의 장점을 비교하면서 통합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사회적경제와 함께 열어가며 여·야, 보수·진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생산적인 결론을 내어 민생 정치가 시작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유승민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토론회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 신 계 른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유일호입니다.

금일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 공청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행사를 준비하신 유승민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고용률 저하, 지역경제 쇠퇴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많은 제도적·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에는 최초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발의 하여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에 적지 않은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유승민위원장께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셨고, 그 노력의 산물이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좋은 고견들이 법안 내용에 잘 반영되어 사회적 경제통합 생태계가 잘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당 정책위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발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아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유 일 호

축 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한 협력과 연대를 기대합니다.”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 참여와 혁신 --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정신이자 사회적 경제의 운영원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현장에서 활동의 전제로 삼아온 가치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이 빠르게 성장하여 외연을 갖추는데 기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는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방식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시스템으로 점차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되도록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새누리당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준비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최근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등 정당의 특별기구가 발족하고,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계가 힘을 모아서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정책의 개발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인 도약을 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준비되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동안 사회적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제도 기반의 하나이기에, 입법이 준비되고 이렇게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이번 법안준비를 주도하신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유승민 위원장은 “사회적 경제의 발전은 한국 경제체제의 진화”라는 통찰로 사회적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유승민 위원장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이 협동, 연대, 참여, 상생의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한국 경제체제의 진화,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의 단초를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의 조건들과 사회적경제계의 필요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왔습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토론회와 향후 입법과정에서 잘 반영되어, 한국의 사회적 경제 분야가 발전하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온 현장의 활동가들과 조직들에게 힘이 되는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행사와 법안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이재 의원과, 이종훈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정신인 협력과 연대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시는 유승민 위원장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한국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저를 포함한 민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 참여와 혁신의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송 경 용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경과

□ 2013년 12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유승민 의원) 구성 의결

- 출범 배경 및 목적 : 사회적경제 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내실화 및 활성화로 한국에 잠재되어 있던 사회적 역량 강화(social empowerment)
-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발굴 및 제시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의 자립·자활 능력 제고로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달성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의 하나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 2014년 1월 2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발대식 거행

○ 발대식 주요 순서

- 임명장 수여식(황우여 대표최고위원)
- 특위 발족배경/목적(유승민 특위위원장)
- 특위 운영안 보고(이이재 특위총괄간사)

○ 기조발표

- 김종걸 교수(한양대 국제대학원)
- 협동조합; 정규돈 협동조합정책관(기획재정부)
- 사회적기업; 신기창 인력수급정책관(고용노동부)
- 사회서비스; 김현주 사회서비스정책관(보건복지부)

- 자활센터; 조남권 복지정책관(보건복지부)
- 마을기업; 정태옥 지역발전정책관(안전행정부)

○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 18명, 자문위원 19명으로 구성
- 총 5개 분과로 구성

[특별위원회 구성]

고문	송광호 의원		
위원장	유승민 의원	특위 총괄간사	이이재 의원
		자문위원단 간사	이홍균 연구위원
분과	간사	위원	자문위원
1분과 (기획조정)	이종훈 의원	김세연 의원 이상일 의원	김종걸, 김현민, 이홍균, 최혁진
2분과 (협동조합)	윤명희 의원	유승우 의원 문상옥 당협위원장	강희원, 김규석, 김기태, 설광언, 이인우
3분과 (사회적기업)	이재영 의원	임해규 당협위원장	고재철, 김혜원, 도현명, 조혜경
4분과 (자활/마을/영농)	김동완 의원	윤영석 의원 김경안 당협위원장	김정원, 문보경, 박진영, 서광국
5분과 (사회서비스)	민현주 의원	박인숙 의원 홍일표 의원, 김규성 당협위원장	김진수, 이철선

□ 전체회의(기조분과 회의)

- 1차 전체회의(2014년 2월 6일)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 2차 전체회의(2014년 2월 26일) : 「사회적경제기본법」 개요
- 3차 전체회의(2014년 3월 5일) :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
- 4차 전체회의(2014년 3월 28일) : 「사회적경제기본법」 검토

□ 분과회의

- 자활분과(4분과) 회의(2월 19일)
 - 김동완 분과위원장 및 자문위원
- 사회적기업분과(3분과) 회의(2월 21일)
 - 이재영 분과위원장 및 자문위원
- 협동조합분과(2분과) 회의(2월24일)
 - 윤명희 분과위원장 및 자문위원
- 사회서비스분과(5분과) 회의(2월 26일)
 - 민현주 분과위원장 및 자문위원

□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창립대회

- 일자 : 2014년 3월 6일
- 참석자 : 이이재 국회의원, 이종훈 국회의원
-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창립대회 선언문
 - ※ 별첨 2 참조

□ iCOOP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 Grand open 행사 참석 및 현장간담회

- 일자 : 2014년 4월 4일
 - 참석자 : 유승민 위원장, 박인숙 위원, 윤명희 위원, 이이재 위원,
김경안 위원(원외당협위원장), 문상옥 위원(원외당협위원장),
고재철 자문위원, 김현민 자문위원, 이철선 자문위원, 이홍균 자문위원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구례 자연드림파크 현장간담회 및
구례 자연드림파크 현황
- ※ 별첨 3 참조

5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향후 계획

□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는 향후 다음의 계획을 추진한다.

- 「사회적경제기본법」 수정 보완 및 발의
 - 공청회 토론 결과 반영 등 수정 및 보완
 - 4월 임시국회 중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관된 개별법 개정안 발의
- 5월 중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순회설명회 개최
 - 대상 : 전국 16개 시·도 당협위원장 및 지방선거 출마자
 - 주제 : ‘지역발전 및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국회의원 이종훈

I. 입법의 배경과 필요성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목표(법안 제1조, 2조 참조)



2.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 주소

정부 부처 · 제도간 칸막이, 임팩트 없는 찔끔찔끔 지원, 중복투자, 출혈경쟁

- 각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양성함으로써 단기간 동안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
- 예를 들어, R&D 성격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의 경우 고용부와 지자체가 연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기업 수에만 집착하여 1,246개 기업에 분할 지원하였음. 그에 따라 지원금이 평균 1,4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사업경쟁력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음.
- '임팩트 없는 찔끔찔끔 지원방식'은 재정지출 대비 사업성과는 매우 낮고, 결국 시장 경쟁력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음

(1) '부처간 칸막이'에 의한 실적경쟁으로 재정낭비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및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은 사회취약계층의 보호, 복지안전망 확충 및 지역공동체 복원이라는 유사한 지향점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임
-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담당부처가 마련한 별도의 지원체계에 따라 실적경쟁에 나서면서 유사·중복사업이 발생, 이로 인해 정부 예산은 낭비되고 사업성과는 미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부처간 칸막이에 따른 중복적 행정 규제

(사례) 취약계층에 속하는 A씨가 자활센터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을 창업하였는데, 이 경우 자활기업이면서도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되었음.

이후 마을기업 지원 사업으로 설비를 갖추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결국 이 기업은 자활기업이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중복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

이 경우 관련 4개 부처로부터 동시에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즉, 해당기업은 고용부에는 연2회 사업보고서를, 기재부에는 연1회 경영공시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안행부와 복지부에도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각종 행정감독을 받아야 함.

-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의 낭비, 민간 입장에서는 과도한 중복적 행정 규제가 발생하고 있음

(3) 사회적경제조직간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사례)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활기업은 '서로 좋은 가게',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스토어 36.5'라는 명칭으로 각각의 판매장 개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둘 다 수익성 악화

- 협업을 통해 공동매장을 설립(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화)하더라도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유사한 업종에 대한 부처간 중복투자는 지원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사회적경제 주체(조직)간 시너지 창출을 막는 제도 칸막이

(사례) 이탈리아 트렌토 시의 경우 570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협동조합이 서로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자체자본과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적경제를 성장시킴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도의 칸막이로 인하여 '자체적인 자립이 어려운 후발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기본법 상 협동조합 등)'과 '경영역량을 확보한 큰 규모의 전통적 사회적경제조직(농·수·축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등)'의 사업연계 및 자본 제휴가 원천적으로 불가
- 현행 협동조합 법제는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자유로이 사업을 제휴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어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

3.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효율성 극대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칸막이제거, 수요자중심, 지속가능, 시너지효과, 상호협력, 정책전달체계 일원화

○ 왜 '통합' 인가?

(1) 정부의 지원·전달체계 효율화 → 정책효과 제고

-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지원 사업이 5개 부처에 분산되어 중복지원과 비효율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독자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면서 예산투입대비 효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각 연계·협업·통합을 강화하는 거버넌스(정책총괄조정조직)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및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소관 개별법에 따라 별도 관리시스템(설립요건·업무보고·평가)을 적용받는데 따른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함

(2)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정책

- 우리정부는 기존 5개 부처의 사회적경제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부의 따뜻한 R&D지원 사업, 미래부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국토부의 마을만들기사업 등 다수의 파편화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이 각 부처의 독자적인 고유사업으로 고립화 되지 않고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진화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통합·연계 되도록 개편 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사회취약계층 B가 자활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아 창업 초기단계에 이르면 맞춤형 One-Stop 서비스에 의해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국토부의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 될 수 있어야 하고, 이후 성장기에는 산업부나 미래부의 R&D 관련 지원 사업과 연결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할 것임

○ 왜 '생태계' 인가?

(1) 생태계구축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이 시급

-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육성정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심화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실제로 정부지원으로 육성된 사회적기업 중 자립운영 가능한 곳은 14%에 불과하며, 1,300여개 자활기업의 70% 이상이 영세성을 면치 못함
- 정부 의존성을 높이는 직접 지원방식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창업보육, 금융, 조달, 컨설팅 등이 진화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생태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고 건강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사회적경제활동에 대한 기업·개인의 기부, 투자, 자원봉사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2)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역차별 해소

- 사회적경제조직은 금융, 입찰, 조달 등에서 영리법인들보다 많은 현실적 불이익과 차등을 받고 있음. 예를 들어 시중금융에서 협동조합과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금융조달 자체가 매우 어려우며 각종 계약 및 입찰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이유로 시장 환경에서 금융, 입찰, 조달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역차별 조항들을 개선하여야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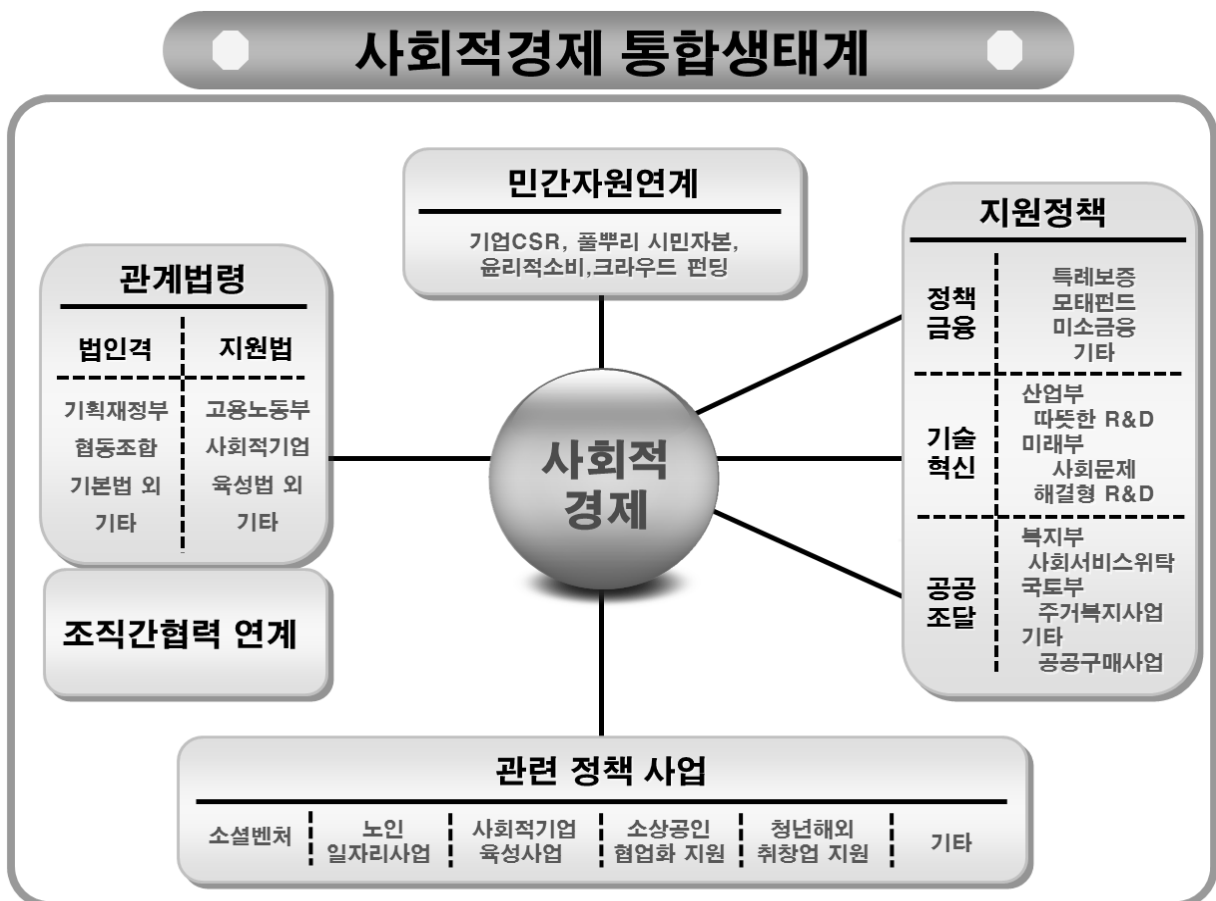
(3)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협력 및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법 영역을 달리하는 다양한 협동조합 간에 조직적·사업적 제휴 허용

(예) [융합모델] 자활참여자의 식품가공 협동조합 설립 +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생협 출자 ⇒ 농협의 원재료 공급 + 생협 판로 활용 + 새마을금고 시설투자자금 융자

- 사회적경제조직간 공동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예산 등의 우선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안)



II. 법의 주요내용

1. 목적과 정의

(1) 목적

-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 <사회적경제>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기본법)
-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법인, 조합, 단체 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산림조합법)

-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법)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법의 주요내용

조문 및 개요	주요내용
제1조(목적)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제1호 (사회적경제 정의)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제2조 제3호 (사회적경제조직 정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조문 및 개요	주요내용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
제6조(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u> 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u>시행계획</u> 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9조(사회적경제 발전 지역계획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u>지역계획</u>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10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
제12조(시·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u> 를 두도록 함
제14조(사회적경제조직 협의회)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한국사회적경제원</u> 을 두도록 함
제16조(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권역별 <u>통합지원센터</u> 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u>사회적경제발전기금</u> 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제21조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제24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제27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사회적경제조직 간 조직 또는 사업 연합, 각종 제휴활동, 협업체 구축</u> 등을 적극 촉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제28조(협동조합 간 협력의 촉진)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u>간에도 협동조합연합회</u>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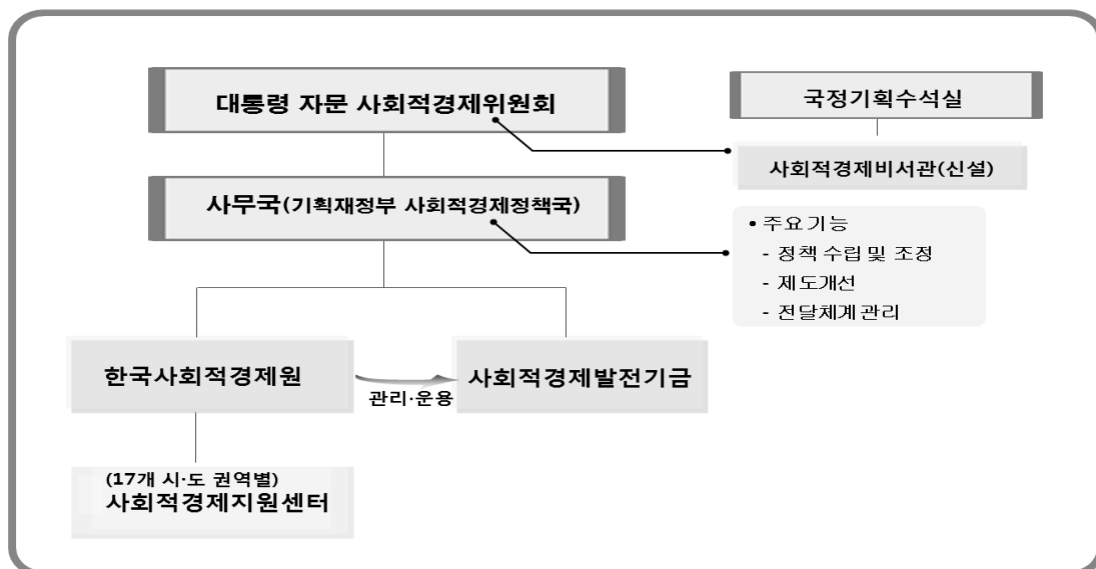
Ⅲ.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성

-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지원 ·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 불가결 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1. 사회적경제 통합 거버넌스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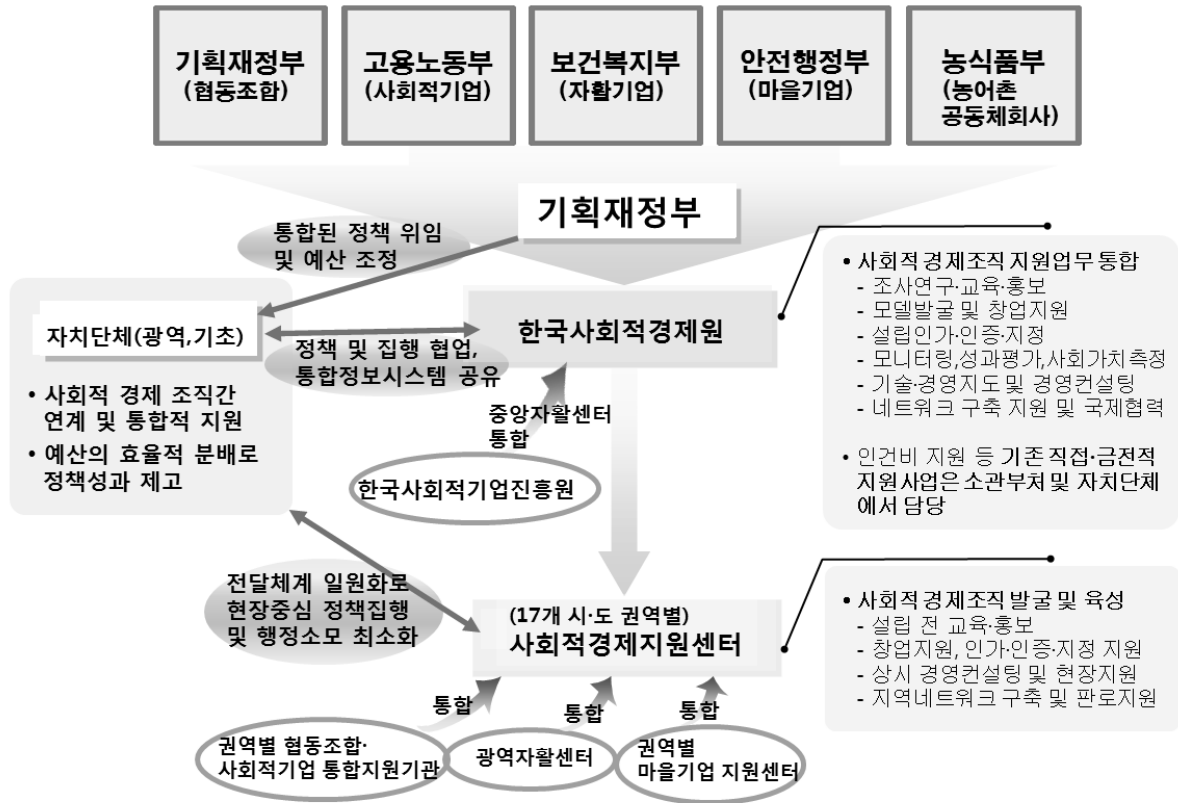
- 정책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부처별 사업을 통합 관리 · 운영할 정책 조정기구 및 수행기관 설립
- 대통령 자문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국정기획수석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함
- 사회적경제 정책의 총괄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신설함
- 정책 실행조직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두며, 한국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관리 · 운용함
-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은 기존의 산재된 관련 금융(자활기금, 모태펀드 등)의 통합, 특례보증 등의 정책금융 제도개선과 민간자원(기부 및 CSR, 윤리적 투자 등)의 연계를 통해 구축 및 운영
- 17개 시 · 도별 전달체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함

【 사회적경제 통합 정책기구 및 수행기관 】



2.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개편 및 일원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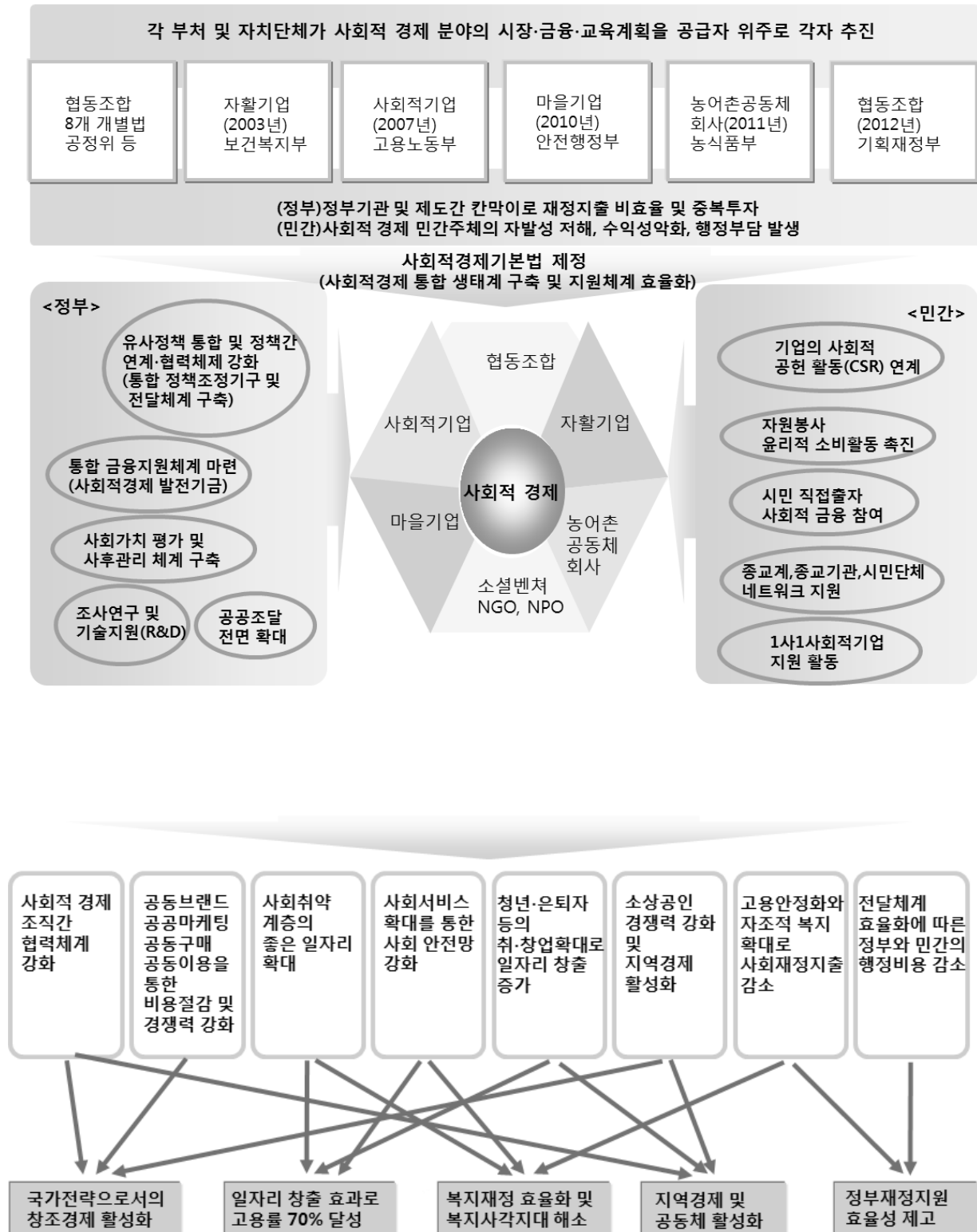
【개편 과정 및 개편 이후의 사회적경제 지원 거버넌스】



-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된 정책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예산을 총괄 조정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개편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를 통합
- 권역별 협동조합·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광역자활센터, 권역별 마을기업지원센터를 통합하여 17개 시·도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함
- 자치단체는 한국사회적경제원과 정책 집행 협업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공유,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집행

IV. 법 제정의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및 지원체계 통합의 기대효과 】



1. '잘 살아보자'에서 "더불어 잘 살자"로의 사회가치 전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 및 미래상 】

As-Is (현재)	To-Be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 일자리(특히, 취약계층 중심) 감소 ■ 복지재정부담 증가 및 사각지대 존재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마을공동체 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극화 해소 및 지역발전 ■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 ■ 사회서비스 확대 ■ 민간주도의 복지서비스 확대 ■ 국가재정부담이 적은 복지체계 구축 ■ 지역(마을)중심의 공동체 회복

-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실천방법은 두레, 계, 향약 등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유사하여 정서적 공감이가
- 실제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월) 이후 현재까지 3,4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불과 5년 만에 2,500개의 사회적기업(인증 약 1,000개, 예비 사회적기업 약 1500개)이 증가
- 사회적기업의 급속한 양적 확대는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서와 수요를 반영하고 있음을 반증

2.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

- 산업구조의 개편과 글로벌화로 인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역량이 약화되었고, 재정 압박과 공공부문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을 통한 고용창출도 한계에 이르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은 사회적경제 분야를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음
 - ※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등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적 경제 분야는 GDP의 5-10%, 전체 고용의 10-20%**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출발은 늦었지만 민간의 호응과 성장속도가 대단히 빠른 편이므로 이에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면 비교적 단기간 내 주요 선진국 수준에 육박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사회적경제는 소상공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은퇴자들의 경제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 70%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 (1)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대기업과 겨룰 수 있는 시장 경쟁력을 회복해가는 모델이 증가되고 있음
 - ※ 제과점 협동조합, 수제구두협동조합, 동네슈퍼협동조합 등을 통해 자생력 확보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성화되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2) 한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는 복지부문에서의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민간부문에서의 상호부조를 강화하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실제로 보육분야, 돌봄서비스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는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 공동육아협동조합, 간병인협동조합, 장애인부모협동조합 등
 -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유대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안전한 사회공동체의 보살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토론

- 김 기 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김 형 미(iCOOP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 유 항 제(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 이 성 수(신나는 조합 상임이사)
- 문 보 경(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 김 정 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 김 종 결(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 4

발 의 자 : 유승민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

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함.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라.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차.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 카.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14조).
-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두도록 함(안 15조).
- 파.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16조).
- 하. 정부는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17조).
- 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24조).
-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사업연합 및 협의체 구축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 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
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
·농어업법인·단체
-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 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
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의 변화와 전망
2. 사회적경제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적경제 분야별·업종별 모범적 사례발굴 및 확산방안
5.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 촉진과 비용 최소화를 위한
설립요건·설립절차·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
평가 등의 통합 및 간소화 방안
6.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7.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8.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제·판로·연구개발
등 지원제도를 연계·통합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9.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관련 기금 운용방안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적경제 발전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11.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통합방향

12.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은 국회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지역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획재정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 계획과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 평가를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예산 등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조정·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의 심의
6.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시사가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추진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근로자, 사용자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무국을 둔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협업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조직 협의회)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3.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4.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니터링 및 평가
5.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참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6.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9. 사회적경제조직 판로개척 지원
10.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국제교류 협력
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 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참여활동 지원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경제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⑨ 경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을 지도·감독하며, 경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제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⑫ 경제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⑬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인 등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센터의 신청·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방법,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17조(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2.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3. 정부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지원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21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전달체제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과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클라우드 펀딩 등 사회적경제 발전활동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훈련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사회적경제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적경제의 날 이전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홍보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조직 또는 사업연합, 각종 제휴활동, 협의체 구축 등을 적극 촉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협동조합 간 협력의 촉진) ①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로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국제협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30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구성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1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제15조제10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제15조제13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원의 설립) 이 법 시행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제15조에 따른 경제원으로 한다.

제3조(경제원의 설립 준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경제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경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경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경제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경제원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경제원 최초의 임원 임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경제원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경제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경제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경제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경제원 설립과 동시에 경제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경제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명의를 경제원 설립과 동시에 경제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경제원이 행하였거나 경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경제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

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경제원의 직원으로 본다.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 제5항, 제7항 및 동법 제21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 경제원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구매계획”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8.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9.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10.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4(자활촉진사업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의3을 삭제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 5(지역사회 자활촉진사업의 위탁)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보장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를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업무위탁)”
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제6호의 사업 중 마을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
사회적경제원 및 동법 제1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다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단체”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중 지역주민 단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창립대회 화보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창립대회 선언문>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양극화는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 -- 이 둘은 그것대로 더욱 발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한국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합니다.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와 경제의 결합입니다.
돈만 추구하는 경제도 아니고, 경제의 생리를 외면하는 공상도 아닙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립을 넘어서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확산을 추구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센터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성공모델로 발전해야 사회적경제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는 여와 야,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천협의회는 오늘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 우리는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중요한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 및 기초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건강한 변화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경제임을 확인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자기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통합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건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정파적, 이념적 이해를 초월하며, 사회적경제 주체, 시민사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등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진정한 협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3월 6일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일동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창립대회>



구례 자연드림파크 현황 및 현장간담회
구례 자연드림파크 현장방문 화보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구례 자연드림파크 방문 및 현장간담회>

□ 구례 자연드림파크 현황

1. 단지 현황

- 단지명 : 구례자연드림파크(논공단지, 전남 구례군)
 - * 지정면적: 144천m², 공용개발, 102억원, 준공 : '11. 5월
- 투자기업 : iCOOP생협 자회사 · 협력사
- 투자규모 : 623억 원, 고용 400여명
- 입주현황 : 18개 공장(완료 12, 건축 2, 설계 4), 고용 237명
- 투자기간 : 2011. 12 ~ 2014. 6
- 투자내용 : 우리밀(친환경 쌀)식품 제조 특화단지 조성

2. 단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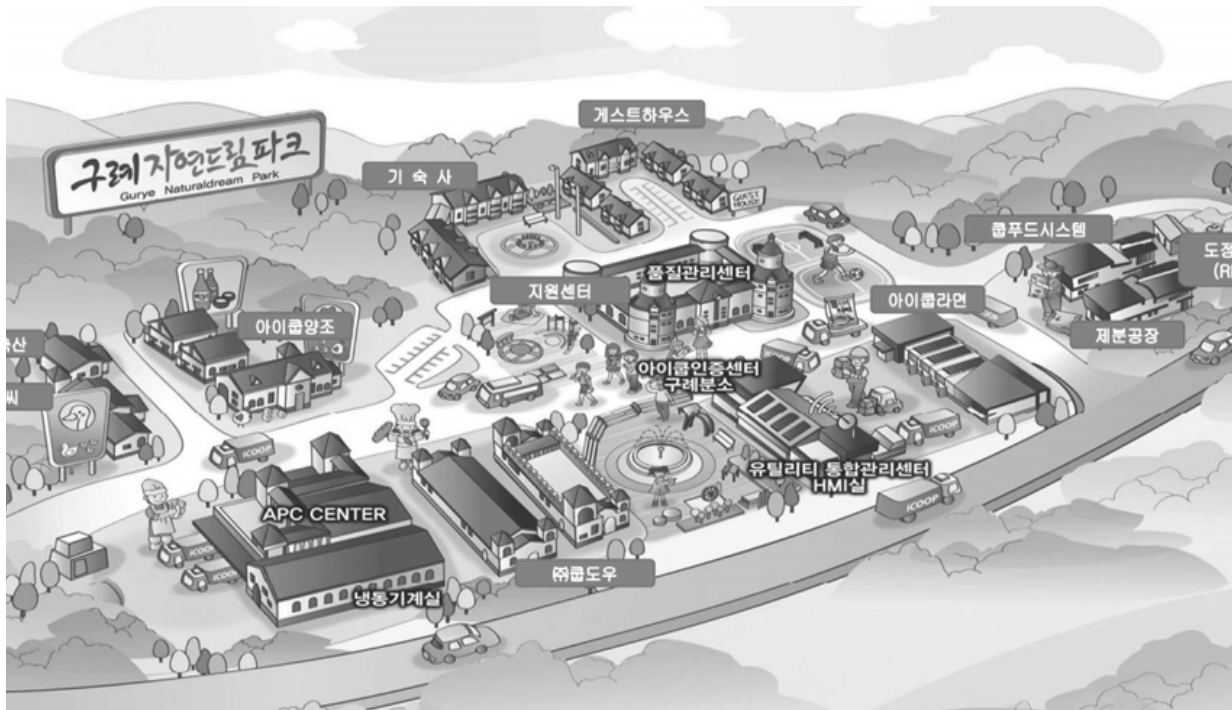
-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친환경 생태단지(Eco-Cluster) 구축
- 'Green Tourism'을 통한 체험형 관광테마파크(6차 산업) 조성
- 생산 기반설비, 인력의 통합운영을 통한 산업 집적화 선도
-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건물 건립

3. 주요 시설

- 라면공방, 우리밀공방, 막걸리공방, 육가공공방, 오리공방, 김치공방, 제분공방, 도정공방, 전분공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통합물류종합관리센터
- 게스트하우스
- 종업원 기숙사
- 지원센터(사무실, 구내식당, 사우나, 영화관, 카페 등)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구례 자연드림파크 방문 및 현장간담회>

□ 조감도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구례 자연드림파크 방문 및 현장간담회>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구례 자연드림파크 방문 및 현장간담회>



